

세계가 주목하는 K-클래식 음악

전일광장

정상연

문화학박사



2025년 대한민국의 4월과 5월은 격동의 시간이었다. 펄펄 끓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웠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인 혼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6월,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시작한다.

늘 그렇듯 시작은 맨 끝에서부터 처음으로 돌아온다. 과정에는 여러 서사가 있었지만 지남의 시간은 교훈이고 내일을 향한 처방이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 진짜 잘해야 한다.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묵묵히 앞을 보고 걷다 보면, 분명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흔적들을 남길 것이다.

지난 몇 달간의 급박했던 시간에 가려져 충분한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들이 있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한강(韓江, 1970~)에 이어 지휘자 정명훈(鄭明勳, 1953~)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Teatro alla Scala di Milano)’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것이다. 또한, 성악가 조수미(曹秀美, 1962~)도 프랑스 문화부

로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코망되르(Commandeur)’ 훈장을 수여 받았다.

‘코망되르’는 프랑스 문화부가 1957년 제정한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이다. 한국인으로는 2002년 김정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에 이어 조수미가 세 번째다. 이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을 국제적으로 드러낸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정명훈의 음악감독 임명은 ‘라 스칼라 극장’ 247년 역사상 동양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14세기 르네상스 발상지이자 오페라의 출발지라 할 수 있겠다. 그러하기에 ‘라 스칼라 극장’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단순한 극장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자부심이며 예술의 정수(精髓)와 같은 곳이다.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겠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시대인 1778년에 개장된 극장은 붉은 카펫, 황금빛 장식 그리고 높다란 샹들리에가 화려함을 더하고, 약 3,000여 석의 객석을 포함해 자체 교육기관과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토스카니니(A. Toscanini)를 비롯해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C. Giulini), 클라우디오 아바도(C. Abbado), 리카르도 무티(R. Muti) 등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했고 조수미를 비롯한 최고의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었다.

한국 클래식은 이제 단순한 국내 클래식 음악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 클래식 음악 콩쿠르를대표하는세계국제음악콩쿠르연맹(WFIMC)에 의하면, 한국 음악가들은 지난 60년간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첼로 등 다양한 부문에서 150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또,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3대 콩쿠르에서 한국인 수상자는 36명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예술과 융·복합 되면서 최고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K-팝이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K-클래식 음악 또한 우리의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고와 결실이 헛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의 엘리트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의 음악 교육 인프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연주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음악가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끝으로 국제적인 음악 콩쿠르와 페스티벌 유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선행된다면, 한국 클래식 음악은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社說

어처구니 없는 시내버스 노조 ‘파업강요’

공공성 잃은 행태 이젠 바뀌야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동조합 간부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운수회사를 찾아가 출입구를 막고 버스출입을 방해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상 권리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불모로 한 파업강요는 응답할 수 없다. 시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대중교통마저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노조의 막무가내식 발상이 개탄스럽다.

노조가 상위라는 이유로 다른 노조의 버스 운행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다. 상위노조와 하위노조간 관계는 내부 구성원 간 협약일 뿐, 위력에 의한 강제성은 주어지지 않는다. 설령 노조간 상이한 생각이 있더라도 내부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면서 월권이다.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노조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하위 노조의 활동을 물리력으로 막은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헌법이 개인에 부여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도 문제다. 노동자의 파업권이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라면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노조원의 근로권도 헌법이 개인에 부여한 권리다. 그 어떤 것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등 헌법적 가치에 앞설 수 없다. 파업의 명분도 사라졌다. 당장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회사를 제외하고 광주시내를 운행중인 버스회사 10곳 중 4곳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100% 운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운행을 결정한 회사의 노조 지부장도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준법 운행으로 추진한다”고 업무 복귀를 공지했다.

분명한 것은 노조의 운행 방해가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시민 지지를 약화시키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관계기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주시도 현재의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해에만 버스 회사에 1402억원을 지원했는데도 이 지경이면 뭐라도 바꾸는 게 맞다. 공공성을 망각한 이기적 행태에 더 이상 시민의 혈세를 쏟아서는 안될 일이다.

신뢰회복 우선인 도시철도 2호선 지연

시민불편 줄이는 대안 내놔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시의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공정 재조정 중이며 6월 중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단계 구간은 당초 2026년 말 개통에서 2027년 초로 늦춰지고, 2단계는 2030년 말로 1년가량 순연됐다. 3단계 구간은 예산 부족으로 아예 개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2024년 개통 계획도 무산되는 등 반복되는 설계 변경과 민원, 공정 지연으로 시민의 신뢰를 점차 잃고 있다.

문제는 지연 자체보다 이에 대한 행정의 태도다. 시민들은 이미 수차례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 복공판 소음, 진동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도로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생길 위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성과지표 달성률을 102%로 보고했다. 형식적 지표에 매달리며 현실을 외면한 결과다. 2호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광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다. 도시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확대, 환경 문제 해결까지 포괄하는 공공정책의 상징이다. 그런 만큼 개통 지연은 단순한 행정 일정 조정으로 볼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

더 늦기 전에 시민 앞에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일정 자체보다 시민과의 신뢰 문제다. 광주시는 그간 “정해진 시간 안에 맞추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과감히 노선을 바꿔야 한다. 시민 앞에 현재 공정 상황을 낱알이 공개하고, ‘부분 개통’이나 ‘우선 시행’ 가능한 교통 정책부터 실행하는 유연함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민원 해결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사정을 알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행정에 주어진 책임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늦어지는 만큼,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의 ‘연기 발표’는 없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공정이 아니라, 신중한 관리와 투명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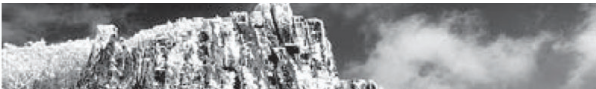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세상

10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멕시코 국기와 미국 국기를 들고 이민세관 단속국(ICE)에 맞서 행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서석대



실천 위에 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이름으로 권력을 부여받았지만, 그 이름을 자기 정치의 장식으로 삼는 순간, 그 권력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정치가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를 자격은, 그 기억을 사회 구조로 바뀔 때 비로소 얻어진다. 시민이 준 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임이자 명령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역사적 요구, 그것이 2025년 6월 치러진 장미대선이 품은 가장 깊은 뜻이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기억이 도구가 아닌 기준이 될 때다. 광주와 5·18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슬로건, 슬픔의 감정이 아닌 책임이며, 부채가 아닌 연대다. 정치가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산 자는 다시 침묵속으로 밀려나고, 민주주의는 다시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1980년의 광주의 영령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 2025년의 정치는, 우리는 지금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그 답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권력은 살아 있는 자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증명돼야 한다. 기억을 갱신하고, 민주주의를 제도와 일상으로 확장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역사적 책임이며, 국민이 그에게 기대하는 진정한 변화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죽은 자의 물음에 응답할 때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상이 다시 한 번 회복되는 사건이었다. 이번 선거의 진정한 의미는 국민을 향해 충구를 겨눈 이들을 단죄하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실로, 단순한 정권심판을 넘은 역사에 대한 응답이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이 물음은 더 이상 문학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1980년 광주에서 총에 맞아 숨진 이들의 이름은 2024년의 거리에 서 다시 불렸다. 세대는 달랐지만, 절박함은 닮아 있었다. 5·18의 기억은 기념비에 갇히지 않았고, 그 기억은 살아남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한국 민주주의는 죽은 자의 침묵에서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왔다.

그러나 기억은 때때로 정치의 도구로 소환된다. 광주가 상징으로만 호출될 때, 정치는 그 기억을 소모한다. ‘기억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윤리도 담보하지 않는다. 선언은 쉬우나 실천은 어렵다. 발터 벤야민이 말했듯, 억눌린 기억은 현재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이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기억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제도와 정치의 언어로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여받은 정치적 정당성 또한 바로 그